

국민통합 의지 ‘호남 총리’ 나오나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개월 사이에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서거가 이어지면서 시대적 여론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적 개편의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비영남 출신 총리를 기용한다는 원칙 아래 호남과 충청 출신의 총리 기용을 놓고 각각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 총리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 등에서 강하게 내세운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의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면에서 호소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남긴 동서화합의 유지를 실현할 수 있는데다 DJ의 서거로 상심한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등 여권

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란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호남 총리를 기용하게 되면 예산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과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호남의 인재풀이 그리 넓지 않은데다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들도 고령으로 ‘과거’ 이미지가 높다는 점이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충청 출신으로 하되 내각에 호남 출신을 적극 중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 총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인물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에 거론되는 인사들을 기용할 경

우, 사실상의 얼굴 마담 역할에 그치면서 집권 2기 내각을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충청 총리론도 막판까지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충청 출신 총리를 기용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

활을 해온 중원의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같은 보수진영이면서 총
청권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자유선
진당과도 '연대' 내지 '견제'의 기능
을 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충청 총리가 기용되면 당장 세종시 문제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충청 민심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충청 총리는 자유선진당과의 협력의 여지를 넓히는 등 여권의 정치 지형 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여론도 DJ
서거 이후 이뤄지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가운데 개편을 통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적쇄신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역배려로 ‘무늬
만 통합’이 아닌 동서회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담은 인적 쇄신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전남도는 26일 오전 도청 서재발식실에서 박준영 지사가 참석한 한 가운데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

난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소방대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 제공)

“문화수도 경제 효과 높이려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야”

문광부 '백서' 통해 제시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문화 전문기업 등으로 구성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백서는 지난 200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담은 것이다.

문광부는 “광주의 취약한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당을 거점으로 우수한 기업·인력 유치를 통

해 문화콘텐츠 창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마케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는 전당 주변에 대한 민간개발 촉진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산업 육성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내 외 민·관·산·학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는 예술과 기술, 문화와 산업간 융합을 위해 국내외의 문화예술 전문가와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 상품

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배급망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역할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로 부각됐다. 현재 교류, 창조, 연구·향유 기능을 전반적으로 포괄해 수행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을 분산 추진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도 실직자 지원 늘린다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산정 등

생계비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전남도가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 등을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전남도는 26일, 종전까지 금융재
산으로 산정해왔던 임차보증금을 일
반재산으로 산정키로 함으로써 전체
적인 생계비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현재 긴급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

준은 가구당 300만원 이하이고 일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30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실직자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임차보증금 등 실직자의 금융채산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면 지원기준이 높아짐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실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illegible]




중고정수기 할인판매

이 좋은 기회에 등차로 보세요!

8만원~11만원

모든 정수기 할인 교환

정수기 프린트 | 정수기 부품